

목 차

2019년 OECD 청렴주간회의 참석 보고서

2019. 4

1.	2019년 청렴주간회의 참석 결과.....	3
2.	세부 회의 결과.....	5
붙임 1	회의 일정.....	14
붙임 2	非oecd 회원국에 대한 공공청렴 권고안 도입 절차 개선안	18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3. 19.(화)~22.(금)/프랑스 파리
- 청렴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f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연 2회)
 - 청렴/반부패 정책 설계 및 시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회원국의 경험 및 모범사례 발표, 정책적 시사점 공유 등
- 청렴포럼(Integrity Forum, 연 1회)
 - 청렴·반부패 증진을 위한 연례 OECD청렴주간('13~)의 주요 행사
- 감사연맹 연례회의(Auditors Alliance Annual Meeting, 연 1회)
 - 회계 감사를 비롯한 청렴 감사 관련 내용 논의
- 참석자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OECD 회원국 대표단 및 초청국(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등)대표단
-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소희 사무관
 - (감사원) 강민아 감사위원, 신상훈 과장, 조형석 연구관 외 1명
 - (법무부) 임하나 검사 외 1명
 - (주오이시디대표부) 황기연 참사관
 - 30여 개국 대표단

□ 주요 결과

- 청렴작업반 비공개 세션을 통해 2019/2020 임기 회장단 선출 절차를 진행하였고, Ms. Anne Rivera (스위스)와 Ms. Silvia Spath (독일)이 공동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칠레와 노르웨이에서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합의됨.
- OECD는 자체적 공공청렴지수를 개발중이며 인식(perception) 수준과 국가별 순위 측정에서 벗어난 지표 개발을 위하여 TF팀을 운영중임.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렴권고안 이행 핸드북 수정안을 작성, 차기 회의 전까지 공유할 예정임.

□ 관찰 및 평가

- 청렴작업반(SPIO)은 비회원국의 권고안 도입시 청렴작업반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OECD 공공청렴 권고안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작업반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또한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OECD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CPI에서 사용하는 인식지수와 국가별 순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1. OECD 고위급 청렴작업반 회의(3.19)

□ 개회

- Ms. Silvia Spath 청렴작업반회의(SPIO) 부의장과 Mr. Marcos Bontoru OECD 공공청렴국장이 환영사를 통해 OECD 공공청렴국 차원에서 금년중 공기업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청렴작업반(SPIO)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공공청렴 권고안 적용하기 : 슬로바키아,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케이스 스터디

- (멕시코) 공직자 채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커리어 전반에 걸쳐 청렴 교육과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중임. 또한 하나의 행동 강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업무 및 직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각각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청렴도 분석가와 이해당사자간의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윤리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음. 191개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후속조치 보고서 발간 예정임.
- 아르헨티나 중앙정부에서는 이해충돌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특정 상황을 입력하면 그 상황이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가이드를 주는 플랫폼 운영중
- 행정 기능의 현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24시간 부패신고/상담 핫라인 운영중

- (슬로바키아) 헌신(commitment), 기준(standards),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책임성(responsibilities), 사회적 참여(whole society) 등의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 청렴성 위험관리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 약 299,000 EUR 상당의 투명성과 단순화(simplification)을 위한 행동계획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며, 리더십, 조화, 파트너십,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임.

□ 책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징계 제도 보장

- (스위스) 현재 자국의 징계제도는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자의 자질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조사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하고, 2) 중앙 법률기관에 의한 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하며, 3) 징계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 또는 거부 소송 등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 (OECD) 징계 제도가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법 제도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함. WEF(World Economic Forum)는 국가별 사법제도가 정부나 개인,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OECD 평균 5점 중 핀란드가 6.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본 6.1점, 한국 4점, 슬로바키아, 터키 등이 2.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4.0 2018)
- 징계 제도를 통한 공공청렴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 위험분야 인지, △ 예방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모니터링과 평가, △ 적법성

준수 등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시행할 중앙관할기구 및 사례별 운영 틀이 마련되어야 함.

□ 非OECD 회원국에 대한 공공청렴 권고안 도입

- OECD 공공행정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7.1월 공공청렴 권고안을 승인한 바 있음. OECD 권고안을 도입한다는 것은 권고안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의미함.
- 참석자들은 아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회원국에 대한 권고안 도입안에 대하여 동의함.
: 청렴작업반은 공공청렴 권고안 도입이 가능한 비회원국에 대한 항목별 사전검토를 시행토록 하며 청렴작업반, 공공행정 위원회, 공공청렴의회(Public Integrity Council)의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권고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회장단 선출

- 2019/2020 청렴작업반 의장에는 지난 회기에 부의장으로 역임하였던 Ms. Anne Rivera (스위스)와 Ms. Silvia Spath (독일)이 공동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의장은 칠레와 노르웨이에서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합의됨.

□ 공공청렴지수 영향력 확대 방안

- OECD는 공공청렴 권고안의 이행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개발을 위하여 공공청렴지수 TF를 운영중이며, 동 TF의 기본 로드맵은 현존하는 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표(more credible alternative to existing indicators)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별 순위를 매기지 않으나 권고안 이행 정도를 서로 비교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에서 사용하는 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인식(perception)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주요 이슈 : 1) OECD 공공청렴 권고안과의 조화 2) 정보 응집 정도(대부분의 지표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나 해당 정보의 응집 정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복잡한 이슈는 정보 삼각측량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 평가결과 제시(국가별 순위 측정 없음.) 4) 정보의 원천(많은 지표들이 다른 2차 정보를 재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OECD는 1차 정보만을 활용하고자 함.) 5) 정보수집 방법(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활용) 6) 성과지향(outputs+outcomes의 조합을 이상적으로 생각함.) 7) 투명성, 모방성, 행동가능성

2. 청렴 포럼(3.20-21)

□ 신기술과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경제적 영향

-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은 정부 운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 디지털 전환은 기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표준, 규제, 관습, 지식 등을 재정립하고 있음.
- 불법 무역거래, 돈세탁, 탈세 등의 분야에 활용

- (앙골라) 현재 앙골라에는 600여개의 부패관련 사건이 접수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ICT 기술은 국내/국제적 증거 수집에 좋은 도구이며, 앙골라 국립은행, 재정정보기관, 검찰청 등 3개기관이 ICT를 활용한 정보수집에 참여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디지털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TI) 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부패가 점점 복잡해지고 적발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ICT 기술은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실소유자, 불법거래 적발, 조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왔고,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플랫폼을 제작하여 요청 국가에 제공해오고 있음.
- 다만, 기술발전이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투명성과 신뢰 강화를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함.
- 발전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 보장, 평등 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전체주의 등 상황에서 악용될 수 있고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음.
-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시스템 활용을 통해 0, 1로는 환산될 수 없는 가치가 간과당할 수 있음.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제작자의 편견,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절차를 자동화하는 혁명을 이루었는데, 과거 부패 발생과 처벌의 시점이 너무 떨어져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피드백이 낮았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사건 발생과 거의 동일한 시간에 해결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됨.
- 새로운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반부패 및 청렴성 제고에 있어 신기술의 위기와 기회

- 신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전환은 반부패 및 청렴성 제고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함
- (기회요인)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 디지털 수단(tools)은 정보 접근성 제고,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 잘못된 관행에 대한 탐색 및 방지 등 반부패 및 청렴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가능성 제공
- (위기요인)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불법거래 채널, 자금세탁 및 탈세,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도전, 민주적인 담론 저해 등
- 신기술을 활용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만드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및 촉진 정책이 필요함.
- (Mihaly Fazekas, Assistant Professor, Central European University) 빅데이터 활용 :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합법적인 정보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 해당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는지, 정보 수집 경로와 출처가 합법적인 경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함. 특히 data linking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부패 적발을 위한 정보 수집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정보를 연결할 때 연결고리가 적절한지, 두 정보 모두 신뢰할만한 정보인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함.
- (멕시코)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함. 멕시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입찰한 업체의 재정상태, 최근 실적 등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 분석가 양성이 필요함. 수많은 정보 안에서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이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NGO에도 필요한 역할임.
- (Beatriz Sanz Redrado, Director of Investigation Support,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번 셋팅이 되면 그걸 업데이트 하고 진화시켜야 하는 것은 인간임.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고 진화시켜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투자임.

□ 동시 세션 : 청렴을 위한 기술

- 블록체인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새로운 기술이며,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운영해 보는 것이 중요함.

-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새롭게 생겨난 것 만큼 지금 우리가 정하는 정책과 규정이 golden standard가 될 것임.
- 인공지능(AI) 기술은 기만행위와 시스템을 적발하는데 큰 장점을 발휘할 것이며 투명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재정범죄는 실제 범죄중 50%만이 적발된다고 함. 현재의 적발 시스템 상에서는 50%만을 발견하고 기소하고 있음.
- 인공지능을 사용한 딥러닝 기술을 도입한다면, 1단계로 기업에서 “machine learning anti-fraud solution”을 도입하여 채용, 공급 관계에서 유착이 있는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2단계로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돈세탁 등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음.
- 실제로 자금세탁 등을 추적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고, 물류의 이동,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여 상호 연결고리를 찾는 프로토타입을 마련함.
- 인공지능의 등장과 활용은 산업혁명의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 현 사회는 정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는 언뜻 보기에는 정량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활용될때는 정성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인공지능을 맹신하여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을 모두 인공지능에게 일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윤리, 거버넌스, 위험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크게 발생할 것임.

3. 감사 연맹 연례회의(3.22)

□ 디지털 전환 시기 감사 환경

- ※ 감사원 강민아 감사위원 미팅 참석 및 한국 사례 발표('19.3.22)
- 투명성, 효과성 등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점점 난해하고 복잡한 반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증가함.
- 감사원(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은 새로운 빅데이터 감사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촉진자이자 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노력중임.

□ 감사원의 디지털 혁신 추진

-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나, 소극적 업무처리에 따른 불편·부담 사항을 제보 받고, 자료 및 시나리오 분석, 심의절차 등을 거쳐 감사에 반영하는 시민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IT 기반 전자 감사 관리시스템, 감사 자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및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 실현 하였음.
- 이러한 혁신을 통해 감사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등 공공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붙임 1 회의 일정	
3.19.(화)	
08:30~09:30	등록
09:30~09:45	1. 개회 • 환영사 : Marcos Bonturi, OECD 공공 거버넌스 국장 Silvia Späth, OECD 청렴작업반회의 부회장
09:45~11:15	2. 공공 청렴 권고안 적용하기 : 슬로바키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케이스 스터디 • MS. Tania de la Paz, 멕시코 공공행정부 차관 • Ms. Laura Alonso, 아르헨티나 공공윤리 장관 • Ms. Denisa Zilakova, 슬로바키아 중앙조정국장
11:15~11:45	커피 브레이크
11:45~13:00	3. 책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징계 제도 보장 • MS. Anne Rivera, 스위스 외교부 • Mr. Giulio Nessi, OECD 공공정책국 정책분석가
13:00~14:30	점심 휴식
14:30~15:00	4.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렴성 확보
15:00~16:30	5. 의사결정 과정의 청렴성 강화
16:30~17:00	커피 브레이크
17:00~17:45	6. 공공청렴지수 영향력 확대 방안
17:45~18:00	7. 폐회 • 폐회사 : Janos Bertok, OECD 공공분야 청렴국장 Anne Rivera, SPIO 부의장

3.20.(수)	
08:00~09:00	등록
09:00~09:30	환영사
09:30~11:00	고위급 패널 : 부패방지 및 청렴을 위한 새로운 기술, 위험성과 기대감
11:00~11:30	네트워킹 브레이크
11:30~13:30	부패 척결 : 세금정보 공유의 영향
	새로운 관점 : 청렴 문화
	Parcels Trade
	데이터 분석 : 부패 조각내기
13:00~14:30	점심 휴식
14:30~16:00	생활속의 불법 자금
	거주지 판매 : '황금비자' 남용 줄이기
	물 청렴 : 부패 거름망
	새로운 관점 : 청렴에 대한 기술 (2/4)
	혁명 규제 : 윤리, 문제점과 기회
16:00~16:30	네트워킹 브레이크
16:30~18:00	해외뇌물사건에 대한 무재판 결의안 OECD 연구 출범
	Youth ResearchEdge Pitch (1/2)

3.21.(목)	
08:30~09:00	등록
09:00~10:30	Youth ResearchEdge Pitch (1/2)
	소셜미디어 : 민주주의의 가짜 친구?
10:30~11:00	네트워킹 브레이크
11:00~12:30	새로운 관점 : 증거주의에 기반한 청렴 정책 (3/4)
	책임성 있는 로비 : 수익과 공공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기
	미래의 문제점 : 새로운 기술과 부패 척결
11:30~11:45	위험성 있는 비즈니스 : 민영화 부패
12:30~14:00	점심 휴식
14:00~15:30	새로운 관점 : 청렴 시스템 구축 (4/4)
	2009 반부패 권고안 검토
	불평등한 상황 : 성(性)과 청렴
15:30~16:00	네트워킹 브레이크
16:00~17:15	청렴 알고리즘 작성

3.22.(금)	
08:30~09:30	등록
09:30~11:00	세션 1. 디지털 혼란 시대의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berto Gowland, 아르헨티나 감사원장 • Tytti Yli-Viikari, 핀란드 감사원장 • Thembekile Kimi Makwetu, 남아공 감사원장 • 진행자 : TBC
11:00~11:20	네트워킹 브레이크
11:20~12:35	세션 2.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감사 분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o Bagdoyan, 미국정부 회계감사원 법률 감사 및 조사 서비스 과장 • Jorge Bermudez, 칠레 감사원장 • 진행자 : TBC
12:35~13:45	점심 휴식
13:45~15:15	세션 3. 변화에 대한 적응 및 감사의 새로운 기술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hen Lisle, 웨일즈 감사원 팀장 • Martin Rubenstein, Transport Canada 감사책임자 • 진행자 : TBC
15:15~15:30	네트워킹 브레이크
15:30~16:45	세션 4. 인공지능 및 감사 자동화 : 기회와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orges Bernede, EUMESTAT 전 감사책임자 • Rona Mellor, 호주국립감사원 부원장 • Phil Tarling, 내부감사협회 전 의장 • 진행자 : TBC
16:45~17:00	폐회식

붙임 2 非OECD 회원국에 대한 공공청렴 권고안 도입 절차 개선안

- On 26 January 2017, following a proposal from the Public Governance Committee(PGC), the Council adopted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Integrity [OECD/LEGAL/0435] (hereafter the “Recommendation”). The Recommendation updated and replaced the 1998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Including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OECD/LEGAL/0298], which was the first global standard in the area of managing ethics and enhancing integrity. The Recommendation provides Members and non-Members having adhered to it (hereafter the “Adherents”) a new strategic approach to move away from isolated anti-corruption interventions and development a coherent integrity system for the public sector. It provides policy makers with the blueprint for a public integrity strategy.
- All OECD legal instruments are open to adherence by non-Members. Non-members can either adhere at the moment of the adoption of the new instrument (in which case this is recognised in the consultations of the Council adopting the instrument) or at any time after adoption.

Process for adhering to OECD Recommendations after their adoption

- For a few Recommendations, such as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Integrity, there is a pre-adherence review which has been mandated by Council. However, for all other Recommendations, the process is as follows:
 - Letter from non-Member requesting adherence;
 - Consultation of relevant substantive Committee(s);
 - Transmission to External Relations committee (ERC) for a no-objection written procedure;
 - If no objection, response to the non-Member from the Secretary-General confirming adherence as from the date of the reply letter.

2. Adherence to an OECD Recommendation represents a political commitment by the Adherent to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Recommendation. As for OECD Members, there is no legal obligatio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Recommendation although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all Adherents will do their utmost to ful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3. Adherence to an OECD Recommendation does not imply any assessment or certifica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Recommend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context of any future process of accession to the OECD, an Adherent to an OECD legal instrument will undergo the same thorough review of its willingness and ability to implement the instrument as a country which is not already an Adherent.

Pre-adherence review process for the Recommendation on Public Integrity

4. In view of the detailed blueprint for a public integrity strategy provided by the Recommendation, it invites non-Adherents to adhere to it “subject to a review by the Working Party of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SPIO). The proposed review would not be an assessment of the potential Adherent’s full public integrity system. It would rather assess whether the interested non-Members can credibly associate itself with the Recommend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practices of existing Adherents.
5. The present note sets out a framework for the review process for non-Members adherence to the Recommendation. Once approved by the SPIO and the PGC, it will be transmitted to the Council and the three pending reviews (Argentina, Morocco and Peru) will be processed.
6. It is proposed that the review assesses requesting countries’ integrity systems, in particular whether a potential Adherent possesses the required underlying bases to advance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in the three pillars of the Recommendation: building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public integrity system, cultivating a culture of public integrity, and enabling effective accountability.

7. The review process for non-Members adherence to the Recommendation would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responsibilities for designing, leading and implementing the elements of the integrity system;
- Fostering an open culture of integrity in the public sector;
- Promoting integrity in the whole-of-society;
- Applying a control and risk management framework that safeguards public integrity;
- Encouraging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stakeholder engagement;

The above mentioned elements are taken from a full integrity review and would be the basic/minimum elements against which potential adherent would be reviewed. At the request of the potential Adherent, additional specific sectoral issues could be covered in the review.

8. The duration of the review would be approximately 8 months. Following receipt of a letter requesting adherence to the Recommendation, the review process would include the following phases:
 - A discussion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applicant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requesting country with regards to governance structures for anti-corruption, review current policies and recent forms concerning integrity, and identify integrity-related challenges.
 - The requesting country would then provide information through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during a fact-finding mission with key stakeholders related to the areas covered by the review.
 - The Secretariat would then review and analyse the information collected, prepare a report setting out the initial findings and making concret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equesting country on how to align with the key elements of the Recommendation set forth in paragraph 7 above.
 - A discussion of the draft report with the requesting country and possible revision of the draft report by the Secretariat.
 - The draft report would then be submitted for consideration to the SPIO, which would thereafter issue a recommendation to the PGC on the Adherence of the requesting country.
 - On the basis of the SPIO’s recommendation, the PGC would provide its

recommendation on the adherence of the requesting country to the External Relations Committee (ERC). The PGC may also recommend follow-up actions to be undertaken by the applicant once an Adherent and suggest that it report back to the Committee thereon.

- If there is no objection from the ERC on the adherence, the Secretary-General would send the applicant a letter confirming that it is considered to be an Adherent as from the date of the letter. Such letter would indicate any follow-up actions suggested by the SPIO and PGC.
9. The review should avoid duplication with other review processes. For this reason, existing assessments, notably by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or carried out b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 United Nations, Council of Europe or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10. The review would be fully financed by the country requesting adherence (including staff time and missions). Depending on the SPIO's level of familiarity with the potential Adherent, the OECD secretariat's previous experience in working with the requesting Adherent and travel cost to the non-Member in question, it is expected that the cost for this review would be between EUR 150,000 and 250,000.